

# 2013년 국가직 7급 행정학 - 해설 : 이명훈

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규모의 경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X-비효율성 ④ 외부효과의 발생

(답) ③ 규모의 경제(자연독점산업),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정리>> 시장실패의 유형과 대응방안

| 유형       | 내용   | 대응방안                                 |
|----------|--|--------------------------------------|
| 공공재의 존재  | 시장에서 공공재 공급은 이기적인 개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생산자들의 과소공급을 야기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함.                              | · 공적공급                               |
| 자연독점의 발생 | 시장에는 자연독점산업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불완전경쟁시장에 형성되어 시장실패를 초래함(비용체감산업, 규모의 경제, 수익체증산업).                | · 공적공급<br>· 정부규제                     |
| 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적은 정보를 지니고 있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어 시장실패를 초래함(정보의 편재, 정보의 불균형).             | · 공적유도<br>· 정부규제                     |
| 외부효과     |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의 부수효과인 외부효과 중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负的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야기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함(외부성). | · 정의 외부효과 - 공적유도<br>· 负的 외부효과 - 정부규제 |
| 불완전경쟁    | 시장에서는 기술적 우위 등의 이유로 독과점이 형성되며, 독점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를 과소 생산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초래함.                | · 정부규제                               |
| 분배의 불공평  | 시장은 빈익빈·부익부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함.   |                                      |
| 경기변동     | 시장은 반복적인 경기 호·불황을 야기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함.  |                                      |

2. 경제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추구하는 정책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답) ① 배분정책은 정부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으로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등이 예가 된다. ②는 규제정책의 예이며, ③은 재분배정책, ④는 추출정책의 개념이다.

<<정리>>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

| 구분         |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
| 개념         | 정부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                     |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정책                  |
|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 · 비용부담자 : 불특정 다수(공공재원)<br>· 수혜자 : 불특정 다수<br>·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미분리 | · 비용부담자 : 고소득층<br>· 수혜자 : 저소득층<br>·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분리 |
| 게임의 상황     |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                                     | 영합게임(Zero-Sum game)                               |
| 참여자의 행태    | 상호불간섭이나 상호수용   | 이데올로기상의 심각한 갈등                                    |

|          |   |  |
|----------|---|--|
| 주요행위자    | 관료 또는 하위정부(다원주의적 성격)  | 대통령(엘리트주의적 성격)   |
| 사상       | 자유주의(1차적 배분)  | 이전주의, 계급주의(2차적 배분)   |
| 추구이념     |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 형평성  |
| 의사결정     | 구유통정치(Pork Barrel)와 통나무굴리기식 의사결정(Log-rolling)   | 계급대립적 성격   |
| 특징       | 하나의 정책이 여러 하위단위로 세분되고 다른 단위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함)  | 세부사업들이 사업 간에 강한 결속력과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부사업단위로 독립적인 집행 불가능   |
| 순응도와 자율성 | 높음(표준운영절차 확립 용이)  | 낮음(표준운영절차 확립 곤란)   |
| 저항       | 낮음  | 높음   |
| 갈등       | 낮음  | 높음   |
| 구체적인 예   |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노동조합·농민·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급, 벤처기업지원금·출산장려금·지방대학지원금·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수출정보 제공·농작물 작황 예보 등 정부의 정보제공, 국유지 불하, 수출특혜 금융, 주택자금 대출 등 | 누진세제도, 통합의료보험정책, 임대주택 건설, 빈민층에 대한 교육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 부(負)의 소득세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민자보호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

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답) ④ 과거에 비슷한 선례가 있는 문제는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쉽게 의제화되고 해결책이 강구된다.

<<정리>>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
| 주도집단의 특성  | 주도집단의 유형                 | 내부주도형이나 동원형이 외부주도형보다 정부의제화 용이   |
|           | 주도집단의 속성                 | 주도집단의 규모, 응집력, 재정력, 구성원의 지위, 명망이 클수록 정부의제화 용이                               |
| 정책문제의 특성  | 문제의 중요성과 시간적 적실성         | 사회적 유의성(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 클수록 정부의제화 용이  |
|           |                          | 문제의 해결책이 없으면 정부의제화 곤란(가장 중요한 영향요소)  |
|           | 문제의 외형상 특성               | 문제가 단순할수록 정부의제화 용이  |
|           |                          | 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정부의제화 곤란(견해대립 있음)  |
|           | 문제의 내용상 특성               | 배분정책 : 편익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제화 용이  |
|           |                          | 규제정책 : Crenson의 문제특성론(대기오염의 비정치화)<br>재분배정책 : 공중의지지, 대통령의 신념이 없는 경우 정부의제화 곤란 |
| 선례와 유행성   | 선례나 유행성이 있는 문제는 정부의제화 용이 |   |
| 극적 사건과 위기 | 극적 사건이 있는 경우 정부의제화 용이    |   |
| 정치적 요인    | 정치체제의 구조                 | 권위주의국가는 동원형과 내부집근형이, 민주주의국가는 외부주도형이 주류임.                                    |
|           | 정치이념과 정치문화               |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에서 정부의제화 용이  |
|           | 정책담당자의 태도                | 정책담당자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 정부의제화 용이   |
|           | 정치적 사건                   |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이 있는 경우 정부의제화 용이   |

4. 킹던(J. W. Kingdon)의 '정책의 창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

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 ① 정보의 흐름 (information stream)
- ②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 ③ 정책의 흐름 (policy stream)
- ④ 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

(답) ① 킹던(J. W. Kingdon)의 정책의 창이론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인 정책의 창에 이르러 그들의 경로가 서로 교차될 때(주로 점화장치에 의해 교차됨)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리>> 정책의 창이론

|    |  |
|----|--|
| 의의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인 정책의 창에 이르러 그들의 경로가 서로 교차될 때(주로 점화장치에 의해 교차됨)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창은 일시적으로 열리며, 열려진 정책의 창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선도자들은 다음번 창이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함.</li> <li>• 정책의 창은 어떤 사안들이 정책의제의 지위에 오르며 어떻게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지, 정치적 사건들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틀임.</li> </ul> |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행정위원회 - 소정심사위원회
-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답) ③ 위원회의 종류로는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 등이 있다. 행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설치되며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를 말한다. 위의 지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심사위원회는 모두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다만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지닌다.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답)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를 감한다.

<<정리>> 공무원의 징계

|     |   |
|-----|---|
| 경징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li> <li>•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1/3을 감함(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li> </ul>  |
| 중징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2/3을 감함(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li> <li>•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함.</li> <li>• 해임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퇴직금엔 영향이 없으며 3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음(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를 감함).</li> <li>• 파면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2을 감하고 5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음.</li> </ul> |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 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답) ④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닌 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4조 6항).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과학적 관리론    | ㄴ. 종신고용보장                |
|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 ㄹ.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③ 미국에서 직위분류제는 사기업의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ㄱ), 보수의 불평등 제거에 대한 요구(ㄷ), 산업사회의 전통과 실적주의의 요구(ㄹ) 등에 영향을 받았다.

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을 구성할 수 있다.

|   | ㉠            | ㉡              | ㉢                   | ㉣              |
|---|--------------|----------------|---------------------|----------------|
| ①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장<br>협의회 | 지방자치단체<br>지방분쟁조정위원회 | 협의체            |
| ② | 지방자치단체<br>조합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br>지방분쟁조정위원회 | 협의체            |
| ③ | 행정협의회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br>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br>협의회 |
| ④ | 지방자치단체<br>조합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br>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행정협의회          |

(답)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 협의체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위원회 - 행정협의회 순이다.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ㄱ은 지방소비세를, ㄴ은 지역자원시설세를, ㄷ은 지방소득세를, ㄹ은 지방교육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세는 ㄴ과 ㄹ이다.

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답) ④ 임시작업단(TF)은 수평적 조정기제에 해당한다. 수직적 조정기제로는 계층제, 규칙과 계획, 계층직위의 추가, 수직정보시스템 등이 있고 수평적 조정기제로는 정보시스템, 직접접촉, 임시작업단(TF) 활용,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팀, 위원회제, 상위통합기구의 활용 등이 있다.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답) ② 행정통제의 과정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ㄴ) ⇒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ㄱ) ⇒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ㄹ) ⇒ 통제주체의 시정조치(ㄷ) 순이다.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 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④ 직무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답)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높지만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정리>> 수평적·수직적 전문화와 직무

| 구분              |    | 수평적 분화(전문화) |        |
|-----------------|----|-------------|--------|
|                 |    | 높음          | 낮음     |
| 수직적 분화<br>(전문화) | 높음 | 비숙련업무       | 일선관리업무 |
|                 | 낮음 | 전문가적 업무     | 고위관리업무 |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 ② 부하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 ③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답) ① 리더의 지원 및 보상에 따른 부하의 노력 제공은 합리적 교환관계를 토대로 하는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을 말한다.

<<정리>>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           |   |
|-----------|---|
| 카리스마적 리더십 | 리더와 부하들의 강력한 감정의 결속을 통해 부하들이 강한 충성과 존경을 가지고 리더의 비전을 수행케 하는 리더십                          |
| 영감적 리더십   |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리더십                            |
| 지적 자극     | 부하들에게 존재하는 현실의 가치와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하는 리더십                                |
| 개별적 고려    |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리더십              |
| 기타        | 비전의 창출, 모험적 활동, 사리초월적 행동의 조장, 신념과 이상에 대한 확신, 동기유발행동의 제시, 환경에의 민감한 대처, 촉매적 작용, 영향의 이상화 등 |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답)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이 아닌 공식적 행동규범과 실제 행동의 괴리현상인 형식주의가 제도화된 부패를 야기한다.

16.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답) ② 공무원직장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답) ③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답)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 정보화 교육,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각 부처에 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나 예산총액에 대하여 예산당국의 강력한 통제를 전제로 하는 하향식(Top - Down)예산 제도이다.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후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답) ② 브레인스토밍은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면적인 접촉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집단 토의기법으로 비판을 금지하고,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의 사용을 지향한다.